

기아차·금호타이어 파업 왜 되풀이되나

無勞有賃... ‘퍼주기식 대응’이 원인

(무노유임)

산별노조 상급단체 완력 ‘정치 파업’ 불러 파업 손실 매년 눈덩이... 경영위기 부추겨

오는 26일 기아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할 경우 17년 연속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금호타이어도 1987년 이후 3~4년을 제외한 14~15년 동안 파업행진을 벌이고 있다. 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일까. 재계에서는 자신들만의 임금인상에 급급한 노조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와 경영진의 ‘퍼주기식’ 대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 매년 파업하나=자동차 파업이 연례화하는 데는 조립산업이라는 산업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6월말로 예정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부분파업만 해도 기아차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별도의 찬반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업에 부정적인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파업이 아니냐는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또 회사와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조합의 이익에만 급급한 노조 집행부의 ‘선명성 경쟁’도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파업손실은 갈수록 눈덩이=지난해

임단협과 관련된 파업으로 2천여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오는 26일부터 1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경우 차량 2천240대 생산차질과 346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파업은 환율하락과 함께 경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고 올해 1·4분기에 737억원의 영업이익자를 기록, 4분기재미나스 성장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174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특히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298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83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평화 분위기=이같은 광주·전남지역의 분위기와는 달리 전국 산업현

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 4월까지까지 포스코·하이닉스반도체·동국제강 등 노사화합을 선언한 건수가 무려 132건에 달한다. 노사화합 선언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때 강성 노조의 상징이었던 코오롱 노사의 파격선언은 우리 노동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노사는 ‘항구 무파업선언’을 통해 지난해 260억원의 적자를 올해 1·4분기 흑자로 돌리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계 인사는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제조업의 해외탈출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간 건설적인 상생로드맵을 만들어 대화와 타협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이 오는 26일부터 시한부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7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기종이 중단된 생산라인.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는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바로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노조입장에서 보면 파업의 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이 전체지연보다 더 무서운 재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면 각종 성과급·보상금으로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대부분 보전해준 것도 파업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임금손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파업강도를 더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는 산업분야임에도 ‘정치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별노조라는 구조하에서 상급단체가 휘두르는 ‘완력’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열흘 여만에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심판대 위에 오른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이어 이후 강연과 기념사 등이 또다시 논란을 빚자 한 번 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8일 원광대 특강발언과 10일 6·10 민주화행진

‘盧대통령 입’ 또 선관위 심판대에

한나라당, 원광대 발언 등 3건 고발

20주년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 인터뷰 등 3건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중립의무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8일 원광대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

오겠나”라면서 비판적 언사를 쏟아냈다.

또 6·10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견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6·10항쟁 기념사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또다시 고발한 데 이어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고발장점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는 실무 차원의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연필뉴스

“기자실 폐쇄 정보 되레 차단” “정보공개 활성화 병행 준비”

盧대통령-언론인 토론회

브리핑실 통폐합과 공무원의 면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 대표들 간의 토론회가 17일 오후 열렸다.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 대통령과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기자실 폐단과 선진화 방안 시행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아서 정보가 오히려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 대통령은 “2003년 실행한 브리핑제 재대로 정착하기 위해 이번엔 보완 시행한 것을 언론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동안 나타난 기자단 등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일용 회장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이 많으며 공무원도 취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회장은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사전에 없었다. 참여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과정의 공유가 아니라 결과물의 공유였다”고 비판했다.

오연호 회장은 “현재의 문제는 2003년 실행

시된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 실현하지 않아서 나온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로 기자를 탓하는데 장·차관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 사람들을 먼저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섭 대표는 “기자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것보다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많이 공개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간다.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기자단의 폐해가 없어지지 않는 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공무원의 정보 공개 회피는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고 반박한 뒤, “언론의 저항이 거세서 브리핑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것을 공무원 탓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단호하지 못해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 공개의 미흡함에 대해 “(정보 공개 활성화도) 병행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브리핑실 통폐합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 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다. (언론은) 반대뿐만 아니라 보도도 한다”며 “하지만 각종 정보 제한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대통령 “퇴임후 노사모 될 것”

노사모 마지막 총회 축하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노사모의 마지막 총회에 보낸 축하메시지를 통해 제2의 노사모 운동을 할 뜻을 확실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참여정부의 성과와 관련, “저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공약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 세계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 성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하여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역사의 과제가 남아있는 한 노사모는 끝날 수 없다”며 “일

기를 마치면 노사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노사모의 성격을 “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역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정치·복지·언론을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 하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즉 제2의 노사모 활동의 성격을 정치·복지·언론에 대한 개혁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 재결집과 대선국면에서의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대선 정국의 변화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노사모 총회에는 노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 김두관 전 우리당 최고위원, 김원웅 백원우 의원이 참석했고 참평포럼 대표로 활동하는 이명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연사로 초청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제52회 호남예술제

제5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및 시상식

*일시: 2007년 6월 29일 오후2시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삼성생명

후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다산문화재단**

심사방식

- 공모에 의한 작품 접수후 심사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일정 및 요강

- 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응모기간: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결과발표: 2007년 7월 3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 작품크기는 8절이며 주제는 제한 없음
- 접수방법: (1)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2) 문의: (062) 220-0541
- 참가비: 개인당 5,000원 (20명 이상 단체시 할인)

※ 공모시 화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